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3호
----------	--------

제출년월일 2023. 9.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구조와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복지 시설 확충으로 반려동물의 양육부담 완화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인식 개선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 정비(안 제8조~제10조)

- 위원회 규정 방식에 맞추어 정비

나. 소유자 등의 의무(안 제11조)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 신설

다. 동물의 구조·보호 등(안 제14조)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사항 추가

라. 반려동물 보건소 및 놀이터 설치·운영 추가(안 제16조, 제17조)

- 동물 복지시설 및 운동·휴식시설 설치·운영

마.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안 제19조)

-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이주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5. ~ 7. 25.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붙임)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붙임)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나) 경 기 도 : 동물보호과, 동물복지과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명존중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 소유자를 위한 배려 및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

한 시설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및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물복지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 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소유자등의 책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현황을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3.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유실·유기동물의 기증·분양
5. 유실·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개체 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 이후 방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제12조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복지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등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 지원 등
3.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 등
4.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관리
5. 반려동물 놀이터 등 운영·관리
6. 유실·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관리 등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동물입양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보건소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의 보호, 이주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6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개체 수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이주대책 등 동물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서식 현황
2.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이주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김포시 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축수산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축수산과장 최근식
	팀장 직위·성명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이정희(☎4297)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20. 2. 25., 2023. 4. 27.>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 26.]

■ 의사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4. 27.>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8조의2 관련)

개설자	시설기준
수의사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는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는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세균배양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는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2.]

② 도지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덧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관리해야 한다.

1.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혹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 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
 - 나.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
 - 다.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 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 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 설치할 것
 - 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⑦ 제4조에 따라 중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수의사는 마취·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건강상태 및 수태 또는 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할 것
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할 것

④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해야 한다.

⑤ 수의사는 수술 시 해당 부위를 철저히 제모하는 등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방사 후에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 봉합 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컷의 경우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2기 유합되도록 할 수 있다.

⑦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

⑧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 후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

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수의사는 수술 후 길고양이가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⑩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 후 회복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방사 전까지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⑪ 겨울철에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암컷 복부 수술 부위의 제모 면적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 중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해야 한다.

1.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할 것
3.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김포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포시의회의원
2.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3. 동물복지정책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4.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⑧ 이 조례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도시정비구역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고, 개체 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 이후 방사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김포시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 운영업무를 시 소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김포072			
정 책 명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부서명	축수산과		
	담당자명	이정희	전화번호	031-5186-4322
성별영향평가 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태과)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구조와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동물 학대 예방과 동물복지 시설 확충으로 반려동물의 양육부담 완화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인식 개선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명 변경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김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 정비(안 제8조~제10조) - 소유자 등의 의무(안 제11조) - 동물의 구조·보호 등(안 제14조) - 반려동물 보건소 및 놀이터 설치·운영 추가(안 제16조, 제17조) -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안 제1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7월 1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9일

김포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배정민/031-980-5582)

축수산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가대상 조문

개 정 안	개선 의견
<p>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1. 생략 2. <u>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p> <p>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u>업무를 위탁</u>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u>지정하려는 경우</u>에는 <u>그 내용을</u>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u>공고</u>하여야 한다.</p> <p>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u>그 관리 운영업무를 시 소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u>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개선 권고)</p> <p>제7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미가 모호하고 개인마다 이와 관련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학위’ 또는 ‘관련 분야 경력 몇 년 이상’ 등의 예측 가능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함</p> <p>제12조 및 18조: 위탁·대행의 요건 및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위험이 있음.</p> <p>“제21조(위탁)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위탁 대행의 업무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등의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함.</p> <p>제12조: 공고 내용이 지정 전 신청자를 받는다는 것인지, 지정 후 지정한 센터를 공고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지정’을 ‘선정’으로 변경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 신청하여야 한다’ 등의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함.</p>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예측 가능성 구체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제7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하는 부정부패가 생길 위험성이 있고,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 제12조, 제18조: 직접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위탁 과정에서 부패 발생 위험이 있고,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는바, 구체화하기 권고함.
- 제12조: 조문의 단어(지정)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 검토결과

- 개선권고안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